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

농림부 장관, 그리고 오늘 발표자 수고했습니다. 정책을 다듬고 새롭게 마련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 하나하나 논평해 주시고 적절한 정책 건의를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성공적인 농업 경영에 관해 좋은 사례를 발표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심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박 운영, 농산물 가공품 등에 대한 과세 문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불러내서 크게 또는 작게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와서 먹고 자고 보따리 좀 싸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형태의 농촌 소득구조의 문제일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똑같은 모습이라도 도시자본이 와서 투자를 상당히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농민들이 직접 밭품, 손품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일종의 생계형에서 출발할 때 어느 수준까지 도움을 주고, 그것이 기업형으로 정착될 때는 또 모든 국민과 함께 세금도 내고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지 농림부에서 연구를 좀 더 해봅시다.

지금도 농촌에 가 보면 농민들이 관광하러 오는 도시민들 상대로 사업하는 경우보다 도시 자본이 농촌에 큰 땅을 사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도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촌공동체가 그만큼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국민이나 세정당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세부분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요새 옛날에 한드미 마을에서 동동주도 사다 먹고 요새는 청명주(충청도 지역의 전통술)도 먹습니다. 과일주 같은 것은 우리고 많이 선물도 보내고 했었지요? 그래서 조금 홍보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 규모와 사업 방식이 어떤 때는 기업적 규모와 형식으로 와서 매출 규모가 커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분자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기업 수준으로 가버렸는데, 조세상의 혜택을—지금엔 얼마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몇 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개 기술 투자,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 투자 부분에 정부가 많이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농림부 장관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 종사하는 국민의 규모가 작고 GDP 대비 농업 생산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는데 왜 농업 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지 않느냐, 기구의 규모를 왜 줄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주의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농민 숫자나 농업 생산 규모가 줄어들어도 절대 규모는 줄지 않았고, 품목과 경영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관련 조직의 규모를 오히려 키워야 될 형편인 것이 더 많아요. 농업 기

술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향상되고 있고 지금은 농민이 농지를 관리하지만, 생계형 농업 구조에서 기업형으로 바뀌고 전업농으로 바뀌고 하면서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이 농지 관리나 중개에 개입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돈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조직에 대해서 저도 불가피하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환기거든요.

농민의 보호 정책이 기본이었습니다. WTO 이후 경쟁력 있는 농업 정책을 시작한 했지만,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 닦쳤을 때 농업발전 대책에 투자한 정부 예산이 제대로 남은 게 뭐 있느냐, 성과가 뭐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경쟁력 있는 농업의 사례로서 이렇게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94년, 95년 농업 할 때죠. 94년 시작했거든요. 그때 소위 농업발전 대책 예산 그때 투자했던 것이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농업 정책의 대 전환기에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기구도 줄이지 않고 비용도 줄이지 않는 정책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습니다만, 2008년 예산까지 제가 짭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제도를 우리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효성 있게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중요한 항목은 우리가 결정해 놓으면 함부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한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농업 기반 부분에 있어서 쌀농사 기반 투자를 많이 했고, 그것은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에 기반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림부 장관 말씀

하신 것처럼 ‘돈은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사이에서 어려운 환경만 극복해 주시면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큰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119조의 농업발전 투·융자 계획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가지고 5년짜리 약 20조 계획을 같이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분의 1은 119조원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약 15조원 정도는 이제 추가 계획이었거든요. 농어촌 삶의 질 대책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쯤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한미 FTA에 대비한 추가 재정을 지금 농림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농업 정책 관련해서 농민 대표들을 만났을 때 ‘돈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느 분야에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집행이 있게 마련입니다. 농업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 대책으로 직불금도 마련해 놓고 또 폐원 자금도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주 엄밀하게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얼른 보면 포도 생산량은 늘어나고 포도가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 수입은 늘어났는데 포도 폐원 자금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한칠레 FTA 한 덕분에 말하자면 일반 농업 분야에 있어서 장목 전환 같은 분야에 또 도움을 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체 1조2000억원이 예산으로 짜여 있는데 예산을 다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요. 이제 수천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하자면 농업 부분에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서 폐원 지원금이 잘못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거든요. 분명히 칠레에서 포도주도 들어오고 있고 포도도 들어오고 있고 또 비싼 다른 과일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

리면 우리 농업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유리온실 지원했던 돈을 다 갖다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파프리카 농장에 와 보니까 96년 같으면 대개 농업발전대책 자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우리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있으니깐 중간에 실패했다고 말했던 자금 중의 일부가 지금 여기서는 큰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 쓰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농업 부분에 최대한 자금을 쓰겠다, 지금까지 대개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전망은 항상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한미 FTA로 인한 손실이라든지 이것도 예측은 하지만, 얼마만큼 뜻대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농민들의 대응 방법이 달라져서 완전히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깎을 생각은 없고요. 농민들이 한미 FTA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변화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대응해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가 없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런 결론이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성공입니다.

우리 농업이 95년경부터 적어도 정부 정책으로서는 농민, 농업에 대한 보호 정책에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성과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만한 그런 성공은 없었는데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지금 우리정부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서는 핵심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좀 더 분명하게 모든 정책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쪽으로 농업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쟁대열에 아예 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은퇴시기에 들어 선 분들이 그런 경쟁대열에 새롭게 나설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모든 농민들이 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할 때까지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소득지원,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은퇴와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지원 같은 방식으로 보호정책, 지원정책을 해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은, 결국 핵심은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정책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미 FTA를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믿고 결단했습니다. 또 안하고 미루는 것이 실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 요인이 많을 것 같아서 결단했습니다. 어쨌든 합심해서 한번 극복해 나가보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면, WTO라는 파고가 없었더라면 보기에 따라서 농업을 포기하고 스스로 퇴출해야 될 분들도 여전히 지금 매달려 있었을 수도 있고,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스스로 한번 성공하겠다고 나서는 농민들도 숫자가 좀 적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WTO라는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FTA라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차피 언젠가는 밀려올 한중 FTA에 대한 사전대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중 FTA 까지를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대책을 한번 세워 나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계획은 세워 놓지만, 시간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농업정책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느냐, 마느냐의 것만 있는 것이지, 좋은 정책은 만들어 놓으면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농업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또 지금보다 더 강화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토대를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